

해 외 동 향

일본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홍서연**

I. 중장기적 경제변동과 노동시장

- 1990년 전후 일본은 머니게임에 열중하여 토지나 주식의 자산가치의 인플레이가 진행된 버블경기의 시기였음.
- 버블경기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금리의 인상 및 부동산에 대한 융자의 규제 등 긴축금융정책이 발동되어 버블경기가 붕괴되고 이에 수반된 불황기는 1991~93년까지로 3년의 시간이 걸림.

◆ 버블경기 붕괴 이후의 경제변동

- 버블 붕괴 이후 10수년간 경기순환은 2차례 반복되고 있으나, 이는 버블 후 조정기간의 성격이 강함.
 - 1997~98년과 2001년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일본 경제의 활력에 큰 타격을 줌.
 - 버블 붕괴 이후 토지가격과 주가가 하락하였고, 1995년부터는 일반 물가도 하락하여 심각한 디플레이션 발생
 - 지가 하락으로 불량채권 누증과 주가의 하락으로 자기자본비율의 저하를 야기
 - 적극적 공공투자와 수출의 증가, 기업의 설비투자로 2차례의 경기회복을 보였으나 반복되는 공공투자로 2001년 말에 정부 적자는 666조엔에 이룸. 따라서 현재

*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제1차 동북아 노동포럼 「세계화시대 고용촉진정책」(2002년 10월 16~17일)에서 발표된 白石榮司(Japan Institute of Labour)의 논문을 요약한 것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ong@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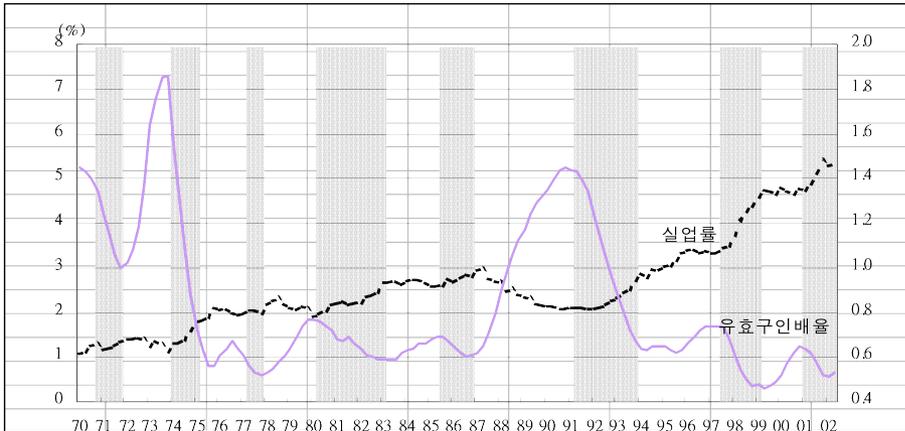
고이즈미 정권은 구조개혁 노선을 추진하고 있음.

-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정체의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이 기간을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90년대’라고 불림.

◆ 노동시장의 장기적 악화

- 버블 붕괴 이전 실업률은 1~3%대였으나, 버블 붕괴 이후 현재는 5%대에 이르고 있음.
 - 버블 붕괴 직후와 그 후 2차례의 불황기의 실업률 상승 상황이 다름. 전자의 경우 실업률의 상승이 불황기의 후반의 일시적인 것이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고용삭감을 엄중하게 행하여 전자에 비해 훨씬 일찍부터 실업률이 상승함.
 - 일본 기업은 직접적으로 고용삭감을 실시하는 일은 드물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이나 경력채용을 줄임. 그러나 버블 붕괴 후에는 ‘리스트럭처링’의 이름으로 명예퇴직 등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 이러한 대응은 호황기에도 변화가 없었기에 실업률은 경기의 회복국면에서도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그림 1 참조)

[그림 1]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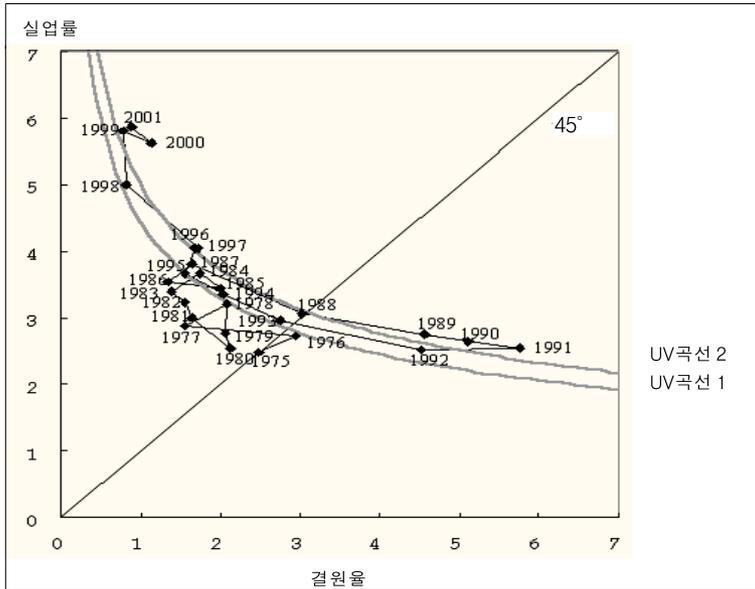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후생노동성, 『직업안정 업무통계』.

- 실업률(U)과 결원율(V)의 관계를 보는 UV 분석에 의하면 버블경기 이후에 UV는 거의 곡선상에서 왼쪽으로 이동. 즉, 버블 붕괴 이후의 실업률의 상승은 경기

의 악화와 그로 인한 노동수요의 격감에 의한 것임. 또한 UV곡선의 뚜렷한 전환이 보이지 않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U와 V의 상관관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1993년부터 수요부족과 공급과잉을 보여주며 2001년의 UV의 위치는 45선보다 제일 먼 지점에 도달함.

[그림 2] UV곡선의 변화



자료: 총무성, 『노동력조사』(각 해의 6월).
후생노동성, 『고용동향조사』.

II.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화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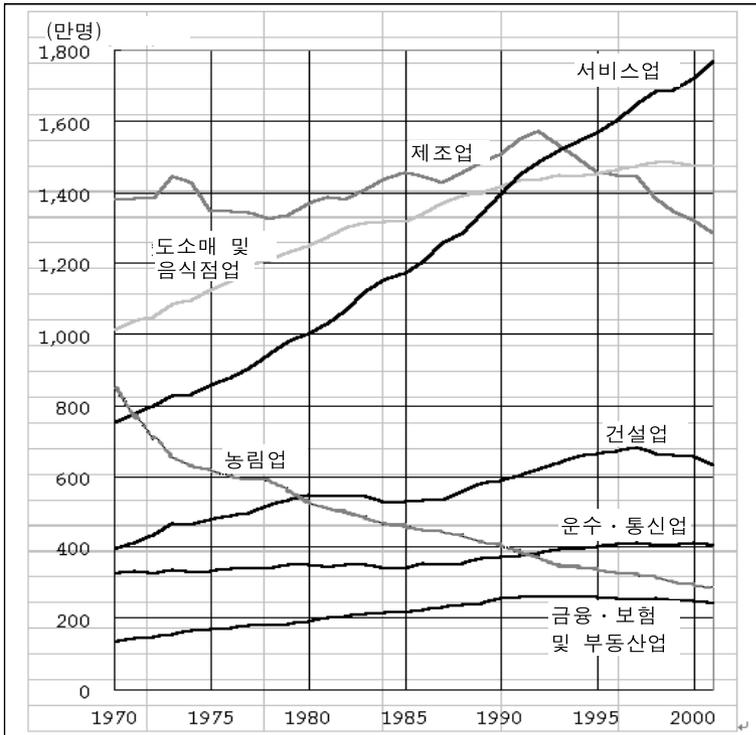
◆ 제조업 고용의 감소와 글로벌라이제이션

- 고도경제성장기에서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중심이었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고용의 증가는 3차 산업부문 중심으로 됨.
- 버블경기로 인해 제조업의 활동은 다시 활발해 짐(그림 3 참조). 그러나 버블의 붕괴로 최근 10년간 300만명 가까이 감소
 - 버블 붕괴에 수반하는 역자산 효과로 인한 국내수요의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이 더욱 큼.

-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효과란 구체적으로 인건비 면에서의 가격경쟁에 대항하기 위하여 임금비용이 낮은 해외, 특히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공정을 이전함으로써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

[그림 3]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의 추이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 1995~2000년의 취업자수의 증감을 소산업 분류 자료에 기초하여 중분류의 산업 별로 증감을 보면 의류, 섬유제품, 전기기계에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산업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임.

◆ 금융·보험업, 도소매업의 고용과 규제완화

○ 버블 붕괴와 함께 금융·보험업에서도 취업자수 감소

- 금융업은 규제에 의해 보호되어 왔으나, 규제완화와 자유화로 버블의 붕괴 발생

- 1997년 가을에는 유력한 도시의 은행, 증권회사가 도산하여 금융불안이 발생하고 불황이 보다 심각하게 됨.
- 주가와 지가의 하락에 의한 불량채권의 누증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더욱 하락시킴.
- 소규모 영세 소매점을 보호하던 대규모 점포의 설립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진척됨.
 - 그러나 이 규제의 완화가 대규모 점포의 설립 촉진에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다만 자동차시대의 발전의 영향으로 주차장을 완비한 교외형의 대규모 점포가 꾸준히 증가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수는 버블 붕괴 이후 증가속도가 느려짐.
 - 도매업에서 취업자의 감소가 크며, 소매업과 음식업에서의 취업자수는 증가함. 도매업에서의 취업자가 감소한 이유는 일본의 유통경로의 축소로 인한 것임.

◆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동향

-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버블 붕괴 이후에도 계속 증가
 - 이것은 재정정책의 지원에 의한 것임. 그러나 재정적자의 확대와 불황대책의 효과에 의문으로 재정정책이 억제되어 1997년을 경계로 건설업의 취업자수도 감소세로 역전됨.
- 서비스업은 버블 붕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고용증가가 계속됨.
 - 사업소 서비스, IT, 사회복지의 3개 분야에서는 고용이 성장함.

Ⅲ. 고용조정과 실업의 실태

◆ 증가하는 기업의 고용조정

- 고용조정 수단 크게 노동시간 조정과 고용량 조정의 2개로 나눌 수 있음.
 - 노동시간 조정은 불황이 경미한 단계에서 실시되며, 고용량은 유지함.
 - 채용 억제, 임시·시간제 근로자의 해고, 배치전환은 고용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

이나, 희망퇴직의 모집, 해고는 고용유지를 포기한 것임.

-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을 조정하며, 고용량의 조정에서도 채용 억제, 임시·시간제 근로자의 해고가 주요 고용조정 수단이었음.

○ 후생노동성은 1992년 9월부터의 2년간과 1998년 9월부터의 2년간에 실시한 고용조정을 조사함.

- 1992년 9월부터의 2년간은 버블 붕괴 직후의 불황인데 반해, 1998년 9월부터의 2년간은 불황보다는 경기확대 국면을 많이 포함함.
- 그러나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은 전자는 60.8%이며, 후자는 52.5%임. 이것은 경기확대기에도 기업들이 고용조정을 실시한다는 것을 나타냄.
-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신규학졸자의 채용삭감, 희망퇴직자의 모집, 해고가 증가하고 있음.

○ 버블 붕괴 이후 희망퇴직의 모집을 실시한 기업이 증가

-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구조조정이 인건비 비용의 삭감이 중심이 됨. 국제적으로 높은 임금의 조정과 디플레이경제하에서의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

◆ 비정규근로자의 꾸준한 증가

○ 정규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과는 대조적으로 임시·시간제 근로자나 파견, 계약사원 등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

- 제조업의 점유율 하락과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의 비율이 높아져가는 산업구조의 변화
- 임시·시간제 근로자는 원래 경기변동에 대한 고용조정의 역할을 했으나, 버블 붕괴 이후 이들의 인건비가 낮으므로 경기변동을 초과하여 항상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음.
- 여성 비정규 근로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져 비정규 근로자의 수요에 대응함.

◆ 실업의 증가

○ 실업자는 1991년에 136만명(실업률 2.1%)이었지만, 10년 후의 2001년에는 2.5배인 340만명(실업률 5.0%)까지 증가

- 실업자수의 증가와 함께 실업자의 실업기간이 장기화
- 2001년 실업자 340만명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106만명이고, 자발적 이직자가 118만명이며, 학졸 미취직에 의한 실업자가 17만명, 그 외의 이유가 85만명임(표 1 참조).
 -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가 현저하며, 비자발적 실업의 이유로는 정년 또는 고용계약의 만료가 고령층에서 많으며, 그 외에 인원정리, 권장퇴직, 회사의 도산, 사업 폐쇄 등이 있음.
 - 남성의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가 현저하며, 10년 전과는 달리 비자발적 실업자의 수가 자발적 실업자의 수를 초과하고 있음.

<표 1> 구직이유별 실업자수의 추이

(단위 : 만명)

		1991	1995	2000	2001
남여 계	계	136	210	320	340
	비자발적 이직에 의한 실업자	31	55	102	106
	자발적 이직에 의한 실업자	55	83	109	118
	학졸 미취직에 의한 실업자	5	11	18	17
	그 외의 실업자	37	50	80	85
남 자	계	78	123	196	209
	비자발적 이직에 의한 실업자	21	38	73	75
	자발적 이직에 의한 실업자	26	42	57	62
	학졸 미취직에 의한 실업자	3	6	11	11
	그 외의 실업자	22	30	49	52
여 자	계	59	87	123	131
	비자발적 이직에 의한 실업자	10	16	29	31
	자발적 이직에 의한 실업자	28	41	52	55
	학졸 미취직에 의한 실업자	2	5	7	6
	그 외의 실업자	15	20	31	33

자료 : 총무성, 『노동력조사』.

- 자발적 실업은 보다 좋은 조건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가사, 통학, 건강상의 이유로 구성되며, 여성이나 청년의 수가 많음.
 - 10년간의 변화로는 비자발적 실업의 증가뿐 아니라 자발적 실업도 증가함. 자발적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전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현상으로 버블 붕괴 후의 새로운 특징임.
- 연령별 실업률은 청년층에서 높고,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저하되며 고연령에서는 남성만이 다시 증가함.

-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률은 대폭 상승. 특히 남성 20대, 여성 30대 전반까지의 연령층에서 실업률의 상승이 현저함. 즉, 버블 붕괴 이후 청년층의 고실업률이 현저해짐.
 - 연령별 실업의 이유를 보면, 남성의 50대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많으며, 30대 전반의 청년층은 자발적 실업이 많음. 즉, 청년층 실업률의 상승과 자발적 실업의 증가가 밀접하게 연관됨. 또한 버블 붕괴 후의 비자발적 이직에 의한 실업의 증가는 주로 남성 50대의 연령층의 영향임.
- 2002년 1~5월의 「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실업자가 취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희망하는 종류, 내용의 일이 아니다’가 28%임. 그 다음으로 ‘구인의 연령과 자신의 연령이 맞지 않는다’(21%)임. 그 외에 ‘조건에 구애되지 않지만 일이 없다’(11%), ‘임금, 급여가 희망과 맞지 않는다’(9%), ‘근무시간, 휴일 등이 희망과 맞지 않는다’(8%)로 나옴.

IV. 미래의 도전

◆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

- 버블 붕괴 이후 신규학졸 채용의 역제가 장기간 계속 됨.
 - 기업은 즉시 작업가능한 인력을 선호하여 경력자를 우선 채용함.
 -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이 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 등의 일시적인 일에 취직하고 이직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프리터는 1997년 151만명에 이르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위해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장래의 사업준비를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
 - 엄격한 수요측의 변화도 고려해야 함. 또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은 미래의 일본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음.
- 60세 이후의 실업자는 정년퇴직에 수반한 것이지만, 50대의 실업자는 회사의 경영악화로부터 오는 비자발적 퇴직에 의한 것임.
 - 50대가 기업에게는 고임금으로 부담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들의 가정에서는 세대

주라는 점에서 이 연령층의 실업증가는 사회적 문제가 됨.

- 50대도 60세 이후와 함께 재취직에는 연령의 벽이 존재. 이 문제에 관해 정부가 구인의 연령제한 철폐 움직임을 보임.
- 사업소, 기업통계(총무성, 2001)에 의하면 시간제 근로와 비정규근로의 비율은 30.8%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소매업, 음식업에서의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은 상당히 높음. 원래는 이들을 채용하는 이유가 인건비의 저하에 있었지만 이들의 비율이 높아져 경영성적을 좌우하는 직무에까지 그들의 힘을 빌려야만 함. 따라서 정규, 비정규간의 임금 등 처우 격차가 뚜렷해짐. 앞으로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됨.
 - 작년 고실업률을 배경으로 노동배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짐. 노동배분의 중장기적인 모습으로 오란타 모델에 의하면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간에 시간당 임금차이는 없고, 단지 근로시간의 길이만 차이가 있음. 그 위에 전일제나 시간제를 선택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
 - 오란타 모델이 실현되면 정규, 비정규간의 불일치는 해소됨. 하지만 일본의 실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아직 요원.

◆ 활력있는 경제의 부활과 고용기회의 확보

- 디플레 경제로부터의 탈출과 성장궤도로의 복귀
 - 금년도 공무원 급여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상여의 삭감으로부터 더 나아가 기본급의 삭감이 실시됨. 이러한 상황은 일본 경제의 디플레와 실업의 증가가 명목임금의 하락으로 진행되는 것을 나타냄.
- 제조업의 부활
 - 버블 붕괴 이후 제조업의 공동화는 일본 경제성장의 날개를 완전히 꺾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됨.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부활이 중요⁷⁹
 - 인건비의 경쟁이 아니라 신기술, 고부가가치의 제품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고 국제 경쟁에 이겨야 함.
 - 정부는 과학기술 개발의 중점분야로서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과 재료공학 등의 4가지를 밝히고 있음.
- 서비스업 고용의 확대
 -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증가되고 있는 분야를 사업소 서비스 관련, IT 관련, 사회복지

지 관련으로 소개하였는데 사업소 서비스 관련의 증가는 기업 내부에서 처리되어 온 각종 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는 흐름 중에서 생겨나고 있음.

- IT 혁명은 미국의 버블이 붕괴하여 일시적으로 활기는 없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 사회의 IT화가 진전되는 것은 정해져 있음. IT 관련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IT 관련 기술자를 육성하고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사회복지 관련은 의료서비스, 고령자의 보호서비스 등의 증가를 말하며 자녀가 적어지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이러한 수요는 증가해 가고 있음.